

데스크칼럼

양동민

정치부장



6·3 대선이 막을 내린 후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 길었던 정치의 계절이 일단락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지만, 정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어느새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서다. 민선 9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실시된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째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민주당의 강세를 점치는 여론이 우세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즈음으로 당시 그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은 민주당 압승의 확인이었다.

3년 전인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채 한 달도 안돼 치러지면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을 얻는 데 그쳤다. 2018년과 2022년 지선 모두 ‘대선의 연장전’이었던 셈이다.

기고

이범우

완도부군수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 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의 ‘완도치유페이’ 정책이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반영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 거소 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인구를 의미하며,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으로 정책 설계와 재정 배분에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025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완도군의 3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4만5921명, 외국인 등록인구 3254

내년 지방선거로 쏠리는 시선

내년 지선 역시 이 정부 출범 1년, 다시말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성과를 인정받는 가장 명확한 잣대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때문에 국정 성과에 대한 논리가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는 ‘양대 정당독점과 반복되는 특정 정당의 출몰’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더 그렇다. 이는 정책보다 정쟁이 부각되고, 민생보다 정치적 구도만 신경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높은 투표율로 압승을 이끌어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아성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 정비와 출마 후보를 찾는 데 주력, 지선 후보군 역시 쏠림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여, 양대 정당독점 현상은 더 고착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선거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와는 결이 다르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시·군·구의 살림을 맡길 사람을 직접 고르는 중요한 선거다. 그렇기에 더욱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앞으로 지선까지 1년 남짓 새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중간평가 민심이 형성될지 여부가 정치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에 약속한 각종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광주시는 시급한 현안이 많다.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

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정부의 재정 보조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전남도 역시 공공의료 개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통한 에코산단·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 굵직한 속원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의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출생률 제고와 인구유출 방지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과제로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이같은 지역의 현안과 과제는 바로 지역을 이끌 차기 리더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시대가 요구하는 현명한 차기 리더를 뽑아야 하는 당위성이 커짐과 동시에 시민의 선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고 내년 지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권과 소통, 강력한 추진력과 원만한 리더십,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기본으로 갖춘 실력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돼야 지역의 미래가 보장된다. 차기 지역 리더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잘 찾아내서 그 인물을 확실히 선택하게 되길 바랄 뿐이다.

완도치유페이, 지역 경제·보통교부세 긍정적 효과

명, 체류인구 16만8533명을 더한 21만7709명으로 집계됐다. 완도군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4.74배에 달한다.

완도군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수립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상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43배가 높은 지역으로, 해양치유, 귀어귀촌, 관광객 등으로 유입되는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지역경제에 참여시키고,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의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는 완도군 주요 관광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등 관광객에게 일정액의 치유페이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지역 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매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방문자의 체류 일수를 늘리고, 반복 방문 또는 정기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를 이용한 관광객이 총 23억897만원의 소비가 치유페이를 통해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6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이 중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000만원에서 5월 12억

6000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으며, 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는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객도 치유페이를 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생활인구’로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비 증대 효과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2026년부터 생활인구 지표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면, 체류인구가 많은 완도군의 경우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상주인구 중심의 재정 배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완도군은 대표적 수혜 사례가 될 것이다.

완도치유페이의 성공적 운영은 단순한 관광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관광 수요를 단발성 소비에서 지역 체류와 장기적 관계 형성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정착 유도, 귀촌·귀어 인구 증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완도군은 완도치유페이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한 생활인구 분석 및 맞춤형 정책 설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의 기여도를 더욱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완도군의 노력이 실질적 재정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정부가 참사 3개월 만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조된다.

아쉽기는 하지만 내사 단계에 머물렀던 수사가 뒤늦게나마 본격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사설

버스 파업종료… 효율적 시스템 구축할때

장장 13일간 이어졌던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됐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 시내버스가 21일부터 정상 운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광주시가 2007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다. 2014년 6월에도 파업은 있었지만 8일 만에 끝났다.

노사는 이번엔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에서 62세 연장에 합의했다. 또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 혁신회의에 노사가 참여해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여기에는 광주시의 원칙 있는 중재도 한몫했다. 애초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연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동결로 맞섰다.

평행선을 달리던 이들의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첫 파업을 했고 현충일 연휴 3일 파업을 중단했다. 평일이 시작되는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초기 비노조원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노조원이 버스 운행에 투입되면서 80% 인파의 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운행률은 점점 떨어졌고 광주시는 대체 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 조정에 나서 3%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내놴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 해 14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광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만큼 과도한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3% 인상안과 정년 1년 연장안을 수용하라고 노조 측에 거듭 제언했다. 결국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해 더 이상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준공영제인 만큼 당장 임금 인상분만큼의 광주시 예산 지원과 수년째 동결했던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파업을 계기로 현행 준공영제 개편 등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창업생태계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순항 기대

광주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광주역 창업 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주역 유류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 쇠퇴해가는 도시를 되살리겠다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곳에 연구개발 융·복합시설인 ‘북합허브센터’, 기업 혁신 성장 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창업·성장·글로벌진출로 이어지는 윈스톱 창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 핵심 거점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이하 스테이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이는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광주역 창업 밸리’의 첫 인프라다.

여기서 ‘스테이지’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 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창업 기업이 광주에서 성장해 글로벌로 도약한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총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 5503㎡에 지상 5층, 연면적 8950㎡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한마디로 창업 기업, 투자전문기관, 창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이다.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기업 문화적 입주공간과 함께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창업 기업 사무공간과 투자기관 전용 공간 외에도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오픈 라운지, 육상정원 등 창업 친화적 공유 공간도 갖췄다고 한다.

현재 총 30개 유망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30여개 투자기관도 상주해 투자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용 펀드 운영, 빛고을 투자챌린지 개최, 대·중견기업 공동 협업 모델 개발,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9개 민간 투자 파트너사를 선정해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인재양성,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형 창업생태계를 이끌 스테이지가 순항할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제주항공 참사 수사 철저히 이뤄지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입건자는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할주로 끝내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